국회는 지금 개점휴업 "민생이나 챙겨볼까?"

지역 국회의원들 주민들과의 소통 나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생 탐방 등 지역민들과의 소통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원구성 핵심 사인인 상임위원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각종 국정 현안을 다룰 수 없게 되자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며 민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8일 광주시 광산구 삼도·본양 등 봄 가뭄 현장을 방문, 농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엔 광주 기아자동차 임원진들과 자리를 갖고 기아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으며, 7일엔 광산구 평동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사장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황주홍 의원은 오는 20일께 '한미 FTA 발표 100일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 초엔 19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농정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장흥·강진·영암 등 3개 군의 군수와 군민 등을 각각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각종 시책 사업 추진방안 및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1순위)와 보건복지위원회(2순위) 등 희망상임위를 정해놓고 관련 정책서적 등을 탐독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열공'에 들어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뚜렷한 좌표를 정하지 못한 채 당 행사나 개인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4·11 총선 이후 자신을 도와준 지역 인사들이나 기존 정치인을 찾아다니거나 당 행사에만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박 대표 빼곤 다른 의원들의 경우 할 일이 없다.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는데, 현재 의원들의 어정쩡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상임위 구성이 제때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핑계삼아 의원들이 임기 초부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유망 지역작가 키워야"

■ 12차 시민소통마당

명성 높은 예술인 보다 정체성 살리는 전시를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7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주제로 제12차 시민소통마당을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가 내·외부적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공감과 호응도를 높이고, 명성만 높은 예술인 보다는 광주의 정체성(identity)을 잘 이해하는 예술인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김상윤)와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위원장 임동호)는 7일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주제의 제12차 시민소통마당을 갖고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지현 목원대 외래교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과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주비엔날레는 17년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빠르고 많은 발전을 이뤄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다른 비엔날레처럼 내·외부적인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발전적·긍정적 측면을 위해서는 "예술행정가를 개방형 임용직으로 기용하는 방안과 함께 미술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과의 협약, 평가보고서 작성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광주비엔날레가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적 랭킹에 의존하는 미술인사보다는 광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예술인 초빙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더불어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다원주의를 실현하고, 미학적 민주화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광주·전남 작가뿐 아니라 전국에서 작품성 좋고 전망 있는 작가들이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선(先) 교육·후(後) 관람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남대 장석원 교수는 '광주비엔날레의 추락과 근본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비엔날레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려는 도시 광주는 권력화된 문화, 예술의 속성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전제되어야 광주비엔날레의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현안 '대선공약' 반영 힘 모은다

민주 지역 국회의원들 첫 모임 의견 조율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의원들이 다음주 중 대선 공약에 반영할 지역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첫 모임을 갖는다.

우윤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은 7일 "다음주 중 민주통합당 전남지역 의원들이 만나 대선 공약에 반영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서남권 광역교통체제 구축사업,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각종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문제들을 개발한 뒤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는 안이 무엇인지 의원들간 사전 조율할 방침이다.

논의를 통해 결정된 각종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해선 대선 주요 공약으로 선정,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선 대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전남의 현안사업을 조기에 공약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수박 겉핥기' 공약이 아닌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굵직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우윤근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마다 정치권에 대선 공약으로 건의하려는 현안 사업들이 있을텐데, 일부 겹치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며 "이를 사전 조율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종북·색깔론에 빠진 대한민국

野 "박정희·전두환 시대 회귀" … 與 "색깔 시비로 종북 못 덮어"

여야가 종북 논란과 색깔론 공방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7일에도 '색깔론'을 비판하며 새누리당에 반격을 가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관을 내세우며 종북논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회귀한 것 같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국정 실패와 여러 현안,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파업 등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북주의 운운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까지 국가관 운운하며 대한민국이 색깔론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이 소위 색깔론으로 국민을 지배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은 한 번도 동의하지 않고 맞서 싸워 그들의 색깔론을 물리쳤다"며 "함께 뭉쳐서 이런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을 헤쳐나가야 하다"고 당부했다.

김한길 당대표 경선후보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부정세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공안정국을 심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런 색깔논쟁, 공안 정국은 정말 소모적이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종북이니, 간첩 출신까지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종북 논란은 색깔론도, 매카시즘도 아니다. 명백한 실체가 있다"며 "색깔론 시비로 절대 종북을 덮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색깔론이니 하는 이념논쟁으로 비화시켜보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종북주의자들이 숨기 위한 전가의 보도이자 시비규명을 막으려는 수법"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날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대응법에 대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나치게 확산시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